

Welfare
Issue
Today

2013
5. 2
vol. 2

복지이슈 Today

- | | | |
|---------------|--|--|
| 권두언 | 3 | 복지는 생명이다 |
| 국내동향 | 4 | [복지정책]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burn out) 예방 정책 |
| | 5 | [복지행정] 동북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 | 6 | [장애인] 자연친화적 직종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증진 |
| | 7 | [장애인]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새로운 대안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 만들기 |
| | 8 | [어르신] 전략적 취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령자 직종 개발 |
| 이슈와 통계 | 9 | 소득수준이 낮으면 광열수도비 부담은 더 높다 |
| 해외동향 | 10 | [미국] 사회복지사 안전 법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
| | 11 | [미국] 다양한 공중보건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 |
| | 12 | [미국]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적 삶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주간보호 프로그램 |
| | 13 | [영국] 통합지역예산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 |
| | 14 | [영국]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가는 함께 사는 마을 : 캐서롤 클럽 |
| | 15 | [독일] 사회개발과 도시개발의 성공적인 접목 : 사회 통합적 도시 |
| | 16 | [독일] 베를린 시 보건사회부, 사회서비스 협약 개정 작업 중 기존 협약 단독 파기해 논란 |
| | 17 | [일본] 신문 판매점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
| 18 | [일본] 빈집을 지역 살롱으로 개조하여 세대 간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 |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편집위원회

송성숙(서울시복지재단 전략기획본부장, 편집위원장)
김승연(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안철홍(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차장)

집필진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장)
김원경(일본복지대학 아시아연구추진센터 연구원)
김지영(서울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장)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
서종녀(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정책연구팀 연구위원)
이순성(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장)
이 웅(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원)
전채경(베를린법경제대학교 유럽정치경제학 석사)
정선경(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개도국사업본부)
정은하(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노인정책팀 연구위원)
현명이(서울시복지재단 지역복지부 통합복지팀 연구위원)
홍석호(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노인복지전공 박사과정)

복지는 생명이다

: 모두의 삶이 봄꽃처럼 피어나는 세상을 꿈꾸며

계절은 4월도 이미 중반을 넘어섰지만, 봄답지 않게 스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시절에, 날씨만큼이나 스산한 소식들을 많이 접했다. 지난 3월 29일, 일곱 번째 맞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과다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검은 리본을 달았다. 4월 4일, 서울시는 자살률을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종합계획 '마음이음1080'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자살자 수는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야기하지만, 2013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하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취약계층을 보듬어 온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가족과 연인을 뒤로 하고 세상을 등질만큼 힘겨워하고 있다. OECD 자살률 통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다.

이번호 「복지이슈 Today」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환경 개선과 안전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예방 정책'과 '사회복지사 안전 법안 제정'을 국내동향과 해외동향의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뉴욕시의 성공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장애인의 날에, 광화문 광장에서는 '장애인차별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 모든 장애인이 평등한 삶을 누리는 사회에 대한 소망을 담아,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담은 두 가지 기사를 「국내동향」에 실었다.

이번호 「이슈와 통계」에서는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민의 소득수준에 따른 광열수도비 부담 정도를 분석하였다. 간명한 그래프를 통해, 저소득가구를 위한 광열수도비 지원이 왜 절박한 과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온 독일의 "사회적 도시" 사업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복지현안들을 해결해 가는 영국(캐서롤 클럽)과 일본(나고야와 히로시마 사례) 등 여러 지역기반 프로그램들이 「해외동향」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러한 사례들 속에서, 우리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소진(burn out) 예방 정책

최근 경기도 용인·성남, 울산 등에서 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하 '사회복지직')이 한 달 간격으로 잇달아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유서에서 과중한 업무부담, 경직된 위계질서, 심리적 위화감 등 사회복지직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토로하였다. 지자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사회복지직은 1명당 평균 200~300가구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직 공무원(이하 '행정직')과 달리 사회복지직은 가정방문을 통해 어려운 형편의 주민들을 돕도록 되어있으나, 주민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일을 하다보면 가정방문은 일주일에 한두 번도 벅찬 실정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숙자, 장애인 관련 업무 외에도 사회복지서비스, 무상보육 등의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각종 민원업무가 폭증하였다. 더욱이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행복e음)'은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사회복지직에게는 오히려 업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생긴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늘 화두가 되어 왔으나,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 및 복지정책 확대에 부합하는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기만 하고 실행 책임은 일선 사회복지직에게 전가하는 소위 '갈대기 현상'이다. 사회복지예산은 2007년 61조원에서 2012년 93조원으로 52% 급증하였으나, 사회복지직은 같은 기간 1만

113명에서 1만 2367명으로 22% 증가하는데 그쳤다(전국기준). 2007년 지자체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된 이후 안전행정부가 통제하는 인건비 내에서만 인력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울시 서대문구의 '복지허브화 사업'은 작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대문구 천연동 주민센터의 경우 청소민원업무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구청으로 넘기고 무인증명기를 설치해 각종 증명발급 업무를 줄임으로써 과거 3명이었던 복지인력을 '6명+α'로 늘렸다. 그 결과 구 전체 주민센터 복지인력 비율이 2011년 24%에서 2013년 현재 42%로, 복지인력의 연간방문서비스 건수도 2011년 550건(주민센터 평균)에서 2012년 2,765건(시범동인 남가좌2·충현의 평균)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행정직의 복지직 전환은 하나의 대안일 뿐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청'과 같이 '복지청'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인 복지직의 국가직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직의 '주변성'에서 비롯된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차별'로 인한 심리적 위화감 해소는 정책개선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사회복지 담당자의 복지는 그들이 대면하는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글 _ 김미현

▶ 관련자료

- 한겨레신문(2013.3.21) 복지업무 '물병현상' 없애야.
- 한겨레신문(2013.3.31) 복지전달체계 근본개선, 국가관리시스템 필요.
- 한겨레21(2013.4.7) 장밋빛 복지정책 흠뻑 복지사 열굴.
- 경향신문(2013.3.31) 주민센터 인력 통합했더니 복지가 바뀌었다.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최근 사회복지분야의 화두는 단연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다. 2013년 우리나라 국가예산은 342조 5천 억원이며 이중 복지예산은 97조 5천억원(28.3%)에 이른다. 또한 중앙정부 16개 부처의 292개 복지사업과 서울시 497개 복지사업(국고보조사업 포함)이 추진되고 있다(2012년 6월 기준). 이렇듯 우리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살고 있지만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른바 '갈대기 현상'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복지대상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개편을 위한 노력들도 시도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1987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년~1999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년 7월~2006년 6월), 주민생활지원국체제 운영(2006년 7월~)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성공적으로 안착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화된 전달체계 개편이 실패하면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과 이용자의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복지전달체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2012년부터 공공분야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확립하고 지역중심·이용자 중심의 동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상담, 방문복지강화, 상시적인 사

레관리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안들을 도출하였다. 실제 일선 동주민센터의 복지담당공무원들은 일반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의 비중을 낮추고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방문복지강화 및 종합상담을 실시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동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으로 다기화된 복지서비스 접수창구를 동주민센터로 일원화하여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접근·신청하며, 이용자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14개 자치구, 96개동을 대상으로 '동복지기능강화를 위한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통합사례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동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복지공무원의 업무경감 및 주민복지체감도 제고를 모색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은 하나의 모형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 지역주민의 다양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모형이냐'보다는 '어떻게 구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서울시의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새로운 도전들이 진정한 변화와 빛나는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글 _ 현명이

▶ 관련자료

- 서울시 사회복지행정연구회(2013.4),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여건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 이준영(2010), 「사회복지전달체계 평가기준의 체계화 가능성 : 책임성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6호, No1, pp219-240.
- 류명석 외(2012), 『서울시 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편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서울시복지재단

자연친화적 직종 확대를 통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증진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일반노동시장에 채용되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중증장애인은 복지시설의 일환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보호고용의 기회를 갖는다. 서울시 직업재활시설은 주로 입가공, 쇼핑백 제조, 제과제빵, 인쇄물 제작, 천연비누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농업 및 원예 등 자연친화적 직종편성은 「교남어유지동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일반 사업체에 취업한 중증장애인들의 직종 또한 단순 노무직, 생산 및 서비스직종에 국한되어 있다.

「교남어유지동산」은 중증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판매한다. 경기도에서는 전형적인 중증장애인의 직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직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기도직업개발연구센터」를 2004년 4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무엇보다도 1차 산업 직종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는데, 원예를 비롯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판매함으로써 안정적 소득보장과 아울러 행동적·정서적 치료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직종으로 농업, 원예 및 화훼 등과 같은 1차 산업 직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범단계이나, 독일 등과 같은 장애인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들의 주요 직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의 직종확대 가능성을 1차 산업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양봉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영농사업단을 공모하여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런 서울시의 시도는 현장전문가들에게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시범사업으로만 종료되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서울시는 영농 시범사업과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자연친화적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연친화적 직종 확대는 지금까지 입가공, 단순노무가 이들의 고유한 직종으로 인식되어 온 사회적 편견을 깨는데 기여함은 물론, 본인의 직업적 흥미와 적성에 따른 직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정한 노동권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글 _ 김혜정

▶ 관련자료

- 김혜정 외(2011), 「장애인고용플라자(가칭) 운영모형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수영 외(201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특별시(2013), 장애인 영농 사업단 사업계획 관련 내부자료
- 경기도직업개발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jdrc.or.kr>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새로운 대안 :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시설 만들기

장애인 탈시설화는 기존의 폐쇄적인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이동 및 이에 따른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빈번하게 발생해 온 거주시설 내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탈시설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탈시설화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되는 장애인의 권리이자 우리시대의 화두라고 볼 수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통해 3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의 소규모화, 체험홈 확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 확대 및 기능 확립 등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체험홈 사업을 시작하였고,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로드맵 구축, 시설 인권피해자 임시 주거지 마련 등 지방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탈시설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경우, 201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장애인의 지역사회자립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화가 비장애인 중심이라는 점과 대형 거주시설에 대한 부정만 있을 뿐 시설

의 개선 및 활용에 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독일의 경우,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주변에 시장, 극장, 은행, 미용실, 식당, 카페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시설을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운타운을 형성하여 장애인 중심의 탈시설화를 이루어 냈다. 또한 지역상공인들에게 대규모 장애인 시설을 임대하는 방식 역시 탈시설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종류 및 필요정도에 따라 Developmentally Disabled(반복적 요양서비스), Habilitative(간헐적 요양서비스), Nursing(예방적 치료서비스), Continuous Nursing(지속적 치료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갖춘 미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무조건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많은 거주시설들이 비교적 지역사회와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독일의 사례와 같이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의 다운타운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탈시설화 관련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탈시설화는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모든 장애인이 탈시설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와 같이 다양화된 맞춤형 탈시설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글 _ 이웅

▶ 관련자료

- 김응수·김성진(2010)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독일 디아코니아 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교회사회사업』 14: 7-28.
- 보건복지부(201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 비마이너(2013.2.15) 「서울시, 탈시설 정책 패러다임으로 나간다」 <http://beminor.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4896>
- 서울특별시(2012) 「서울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
- 심민선·민주(2010) 「경상남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방향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전략적 취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고령자 직종 개발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현재 서울시 고령자 직종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이미 수많은 고령자¹⁾ 직종이 개발된 바 있지만, 실제 고령자 취업은 여전히 비전문직·비숙련적 육체노동을 요하는 단순노무직²⁾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종 개발에 대한 시민 체감도는 현저히 낮다.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최근에는 관련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어서, 변화하는 사회상이나 신노년층의 새로운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중앙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 하여, 지금 현재 일자리 매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없는 선진국의 직업과 일자리 창출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주문하였다.

직종 관련 연구는 국내·외 사회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본적으로 직종의 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령자 직종개발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직종의 다양성보다도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직종이라도 실제로 고령인력이 전혀 채용되지 않거나 일정한 소득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고용 활성화 목적의 직종으로서의 의

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에서 진행 중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와 현장전문가 인터뷰에서 제안된 직종을 기초로 하여, '수행적합성', '진입가능성', '공급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고령자 직종으로서의 선정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볼 때, 많은 직종들이 고령자 직종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고령자 직종 개발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바는 없으나 현재 취업이 활발하거나 관련 정책수립 중인 직종(바리스타, 도슨트, 영화관도우미, 도시농업전문가, 경로당 활성화코디네이터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사회적으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것으로서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종(중간소음관리사, 지역내용급치료사, 복지주거환경코디네이터, 개인여가컨설턴트, 반려동물학대감시사 등)이 있다면 가능한 정책까지 구상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고령자로서 할 수 있거나 고령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고, '고령자도 할 수 있는 일'만 있다. 그러므로 고령자를 위한 직종은 적은 수의 직종이라도 확실한 정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 _ 정은하

▶ 관련자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 2010.7.5)[법률 제10339호]
- 구재선(2009) 서울시 고령자 적합직종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김중진·박상철·송화진(2007)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분석 및 재선정, 한국고용정보원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kr/president/briefing/briefing_view.php?uno=37

1) 서울시에서는 노인에게 대해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55세 이상을 말함)'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2) 서울시고령자취업일선센터 취업자수 상위 직종 : 환경미화직, 시설관리경비직, 배달직, 운전운수주차관리, 서비스판매직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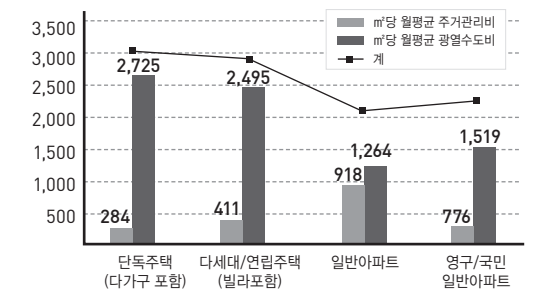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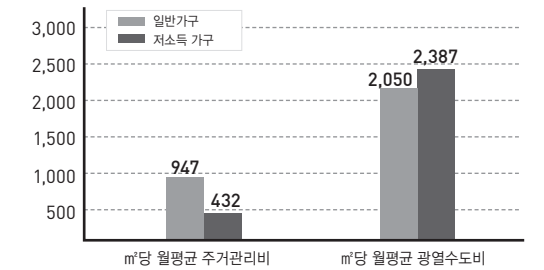
소득수준이 낮으면 광열수도비 부담은 더 높다

2012년 한국복지패널 설문자료를 중심으로 서울시 거주자¹⁾의 주거관리비²⁾와 광열수도비³⁾를 분석한 결과,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광열수도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m²당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저소득가구보다 일반가구가 2.19배 높지만, m²당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가 1.16배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평균 주거면적은 77.5m²)의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는 월평균 232,268원이고 저소득가구(평균 주거면적은 49.7m²)는 월평균 140,104원이다.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를 비교해 보면, 주거관리비는 일반아파트와 영구/국민임대아파트에서 높았고, 광열수도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서 가장 높았다(그림 2 참고). 주거관리비는 대부분 법적 주택관리 대상 아파트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또는 다세대주택/연립주택(빌라 포함)보다 높다. 하지만 광열수도비는 모든 주택 거주자들이 지불하는 필수 비용으로 영구/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들보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거주자들이 1.79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현황 주거급여 제도를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다(4·1 부동산 대책, 2013).

주택바우처 제도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과 에너지는 인간이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저소득가구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 등의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저소득가구의 주택유형별 주거관리비와 광열수도비 분포

글 _ 서종녀

▶ 관련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i.go.kr/USR/NEWS/m_71/dtl.jsp?lcmepage=3&id=95071878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http://www.koweps.re.kr/>

1)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구분은 중위 균등화 소득의 60% 기준임.
2) 주택설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부동산수수료, 정화조비 등임.
3)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등임.

해외동향 _ 미국(메사추세츠)

사회복지사 안전 법안 제정으로 사회복지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2013년 3월 11일, 메사추세츠의 패트릭(Patrick) 주지사 사회복지사 안전 법령(Social worker safety in the workforce legislation)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 법안은, 2008년 가정방문 중이던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 병역을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의 칼에 찔려 희생된 것을 계기로 구성된 메사추세츠 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Massachusetts Chapter) 안전대책위원회의 권고로 제정되었다.

앞으로, 주정부의 보건복지부서(Executive Office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 의해 운영되거나, 허가 및 자격이 부여되거나, 사업비를 보조받는 모든 프로그램의 운영자는 일선의 사회복지사와 봉사자뿐만 아니라 기관의 모든 사회복지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지 범죄 예방과 위기관리 계획(Violence Prevention and Crisis Response Plans)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 계획은 적어도 매년 갱신되어야 하며,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예방교육과 훈련의 골자는 법에 명시되어 있다.

글 _ 홍석호

참고자료

메사추세츠 사회복지사협회가 제안하는 안전 훈련 프로그램(Safety Training Program)의 일곱 가지 요소

정규 직원 훈련

1. 안전 요소 교육(Safety Essentials) :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제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2. 위험 평가 훈련(Violence Assessment) : 각 서비스 유형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군을 찾고 평가해 본다.
3. 설득을 통한 위기상황 모면 훈련(Verbal De-escalation) : 위기 상황에서 설득과 대화를 통하여 모면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을 익히고 연습한다.
4. 사회복지 행정 및 임상 안전 계획 수립(Administrative and Clinical Safety Plan of Action) : 사무실, 방문, 그리고 이동 중의 모든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계획해 본다.

사례 관리와 상담 훈련

5. 임상 상담 훈련(Clinical Consultation) :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가정하여 슈퍼바이저와 경력자로부터 경험과 조언을 얻는다.
6. 위험 클라이언트 다루기(Treating Violent Clients) : 실제의 폭력적인 클라이언트를 가정하여 그들을 다루는 방식을 연습한다.

기관 관리자 훈련

7. 기관 안전 정책과 절차 수립(Designing Administrative Safety Policies and Procedures) : 다양한 측면에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안녕을 위한 제반 정책을 수립 실행 평가 한다.
<http://www.naswma.org/displaycommon.cfm?an=1&subarticlenbr=51#LegislationAndStateGuidelines>

▶ 관련자료

GWright(2013.3.14), Social Workers Speak
<http://www.socialworkersspeak.org/media/mass-governor-signs-social-worker-safety-bill-into-law.html>

해외동향 _ 미국(뉴욕)

다양한 공중보건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적인 자살 예방 정책

서울시는 지난 4월 4일, 2020년까지 자살률을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종합계획인 '마음이음1080'을 발표하였다. 서울의 자살률이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26.1명(2009년 기준)에 이르는 가운데, 이의 1/5 수준에 불과한 10만 명당 5.5명의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시의 자살예방 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뉴욕시의 자살률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는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이 포함된 공중보건 증진 전략을 들고 있다.

첫째, 사전 추적 및 관찰 시스템(advanced tracking and surveillance). 뉴욕시는 그간 공중보건과 치료를 목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관찰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에 의해 자살 고위험군을 파악하여 교육과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emergence response). 뉴욕시 정신건강협회(Mental Health Association of New York City)와 건강 및 정신건강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응급 전화 서비스 라이프넷(LifeNet)은 2천 명이 넘는 서비스 제공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정신건강 전문가와 자원봉사 단체와 시립병원들의 후원으

로 운영되는 동료상담가들로 구성된 26여 개의 이동상담팀(Mobile Crisis Team)이 심리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다층적인 공중보건 및 사회서비스(multi-layered public health and social services). 손쉽게 이용 가능한 다양한 공중보건 서비스도 자살률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서와 조직들 간의 협약을 통해 조정된 기금을 기반으로, 2천개가 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넷째, 총기 규제(Gun Control).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총기 휴대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도시들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들에 힘입어, 뉴욕시의 총기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의 12%(2010년 기준)로 미국전체 평균인 51%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개입을 위한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for community intervention). 지역사회의 내부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과 공동체적 참여의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911 테러 이후,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신적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도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게 되면서,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감소되고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인 공동체 정신이 형성되었다.

글 _ 홍석호

▶ 관련자료

서울시 보도자료(2013.4.4), "서울시 자살률 2020년까지 절반으로 낮춘다."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presentation.jsp?search_boardId=42&act=VIEW&boardId=42
Larry McShane, New York Daily News(2012. 2. 23), "New York City suicide rate is half the national average, Health Department says."
<http://www.nydailynews.com/life-style/health/new-york-city-suicide-rate-national-average-health-department-article-1.1027694>
Office of Mental Health(2012. 8. 11), Suicide Prevention and Public Health in New York City
http://www.omh.ny.gov/omhweb/savinglives/volume1/Vol1_SuicidePreventionPublicHealth.htm

노인과 장애인의 독립적 삶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주간보호 프로그램

캘리포니아주 노인부(California Department of Aging)는 2012년 4월부터, 주간 성인 보호(Adult Day Health Care)프로그램을 개정한 '지역사회 기반 성인 보호(Community Based Adult Services: CBAS)'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CBAS는 노인 및 장애인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역량(self-care capacity)을 강화하여 원치 않는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독립적인 삶을 위해 당사자, 가족,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주간성인보호프로그램에 비해 대상자 선발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 CBAS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250개의 센터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CBAS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로 전문가 팀은 (예비)환자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여 개인에게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문 요양 서비스,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정신건강관리서비스(mental health service), 치료활동, 사회복지서비스, 개인위생관리서비스, 식사, 영양상담, 교통수단 제공 등을 포함한다.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노인부(Illinois Department on Aging)에서는 시설 수용을 원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남고자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성인 주간 서비스(Adult Da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다. 성인 주간 서비스 센터

는 건강 검진, 복약 지도, 개인 위생, 레크리에이션, 정신 건강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개인의 영양상 필요에 적합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다.

한편, 뉴저지주 노인국(State of New Jersey,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Division of Aging Services)은 노인 및 장애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위한 포괄적 선택(Global Options for Long-Term Care; GO)을 제공하고 있다. GO는 메디케어(Medicaid)의 지원을 받는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프로그램 세 가지를 통합한 것으로, 미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U.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GO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운영자는 노인 및 장애인을 진단하여 개인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클라이언트는 이를 바탕으로 주간 건강 서비스, 개인위생, 식사, 교통수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다. GO를 통해, 클라이언트들은 넓은 범위의 가정 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돌봄 서비스 운영자(care manager)들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대한 돌봄 계획을 보다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선호도에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글 _ 정선경

▶ 관련자료

- 캘리포니아주 CBAS 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aging.ca.gov/ProgramsProviders/ADHC-CBAS/Default.asp>
- 일리노이주 Adult Day Service 홈페이지 <http://www.state.il.us/aging/1athome/adult-day.htm>
- 뉴저지주 Global Options for Long-Term Care(GO) 홈페이지 <http://www.slate.nj.us/humanservices/doas/services/go/index.html>

통합지역예산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

영국 지방정부협회(Local Government Association; LGA)와 영국정부는 지난 3월 공동으로 출간한 「지역단위 공공서비스 개혁: 통합지역예산 안내서(Local Public Service Transformation: A Guide to Whole Place Community Budgets)」를 통해, 통합지역예산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을 통해 수십억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비스 수준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지역예산이란 공공 부문, 민간 부문, 자원봉사 단체 등 지역사회의 각 분야의 종사자들이 협력하여, 기관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협력을 토대로 한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공공서비스의 비용효과성과 만족도를 함께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2011년 10월에 지역사회·지방자치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발간한 「지역예산 설명서(Community Budget Prospectus)」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에섹스(Essex), 맨체스터(Greater Manchester), 웨스트 체셔(West Cheshire)와

런던의 3개 자치구 협의회(London Tri-borough)가 통합지역예산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2012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중복서비스를 제거하여 공공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런던의 3개 자치구 연합에서는 보건 및 돌봄서비스 예산을 통합하여 취약계층이 자택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연간 3천8백만 파운드의 병원 및 요양원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영국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은 2013년 3월 13일 발간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통합지역예산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제적인 회계법인인 Ernst & Young은 독자적인 분석을 통해, 모든 지역이 지역예산을 채택한다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된 간섭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와 중복,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매년 40억 파운드(한화 약6조 8천억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 _ 김지영

참고자료

런던 3개 자치구의 공공서비스 공유(Tri-borough shared services)

-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해머스미스&풀럼(Hammersmith and Fulham), 켄싱턴&첼시(Kensington and Chelsea) 등 런던 서부지역의 세 개 자치구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프로젝트이다. 아동서비스, 성인을 위한 사회서비스, 도서관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세 개 자치구가 공유하고 지원인력을 줄임으로써, 대인업무 인력의 감축 없이도 2011년 10월까지 백만 파운드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012~2013년에는 7백7십만 파운드, 2014~2015년에는 3천3백4십만 파운드, 2015~2016년에는 7백만 파운드를 추가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John O' Rourke(2011.2), 'Bold Ideas for Challenging Times: Tri-Borough Integration' <http://www.cih.org/resources/PDF/Regional%20Support/London%20resources/presentations/hr-seminar-oct11/John-O-Rourke.pdf>
- City of Westminster 보도자료(2012.3.7) 'Tri-borough programme boosts savings target to £40m' <http://www.westminster.gov.uk/press-releases/2012-03/tri-borough-programme-boosts-savings-target-to-%C2%A34/>

▶ 관련자료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보도자료(2013.3.25) 'Radical public sector reform can save billions and improve services' http://www.local.gov.uk/web/guest/media-releases/-/journal_content/56/10171/3930831/NEWS-TEMPLATE
- HM Government & Local Government Association(2013.3) 'Whole Place Community Budget Guide' <http://communitybudgets.org.uk/wp-content/uploads/2013/03/Guide-to-Whole-Place-Community-Budgets.pdf>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11.10) 'Community Budgets Prospectu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272/2009783.pdf

따뜻한 한 끼 식사로 만들어가는 함께 사는 마을 : 캐서롤 클럽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FutureGov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정에서 만든 요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계하는 캐서롤 클럽(Casserole Club)을 운영함으로써,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외로움과 영양 실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캐서롤 프로젝트’는, 요리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집에서 만든 따뜻한 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캐서롤은 오븐에 넣어서 천천히 익혀 만드는 찜과 비슷한 요리로, 영국식 가정요리를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2012년에 서리 주(Surrey; 런던 남부에 인접한 카운티) 정부와 라이게이트(Reigate)와 밴스테드(Banstead)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 라이게이트(Reigate)와 밴스테드(Banstead)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사업을 통해 200건의 음식 나눔이 이루어졌다. 캐서롤 프로젝트는 요리 수령자(‘Diner’)는 물론 요리 제공자(‘Cook’)에게서도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캐서롤 클럽에 ‘Cook’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 지역주민은 “음식을 나누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의 뼈대였다. 우리가 지역 사회를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음식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성공 이후, 홈페이지 등록자수는 1,600명을 넘어섰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도 늘어나 런던의 타워햄리츠(Tower Hamlets)와 바네트홈즈(Barnet Homes)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캐서롤 프로젝트’는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디자인카운슬(Design Council), 국립과학기술 연구재단(NESTA)로부터 기금을 받고 있다.

캐서롤 프로젝트 운영상의 가장 큰 어려움은, Diner들의 80%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보니 인터넷 접근이 힘든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구와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 4월호 13페이지 소개) 등 지역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Diner들을 찾아내어 등록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은 ‘Cook’과 ‘Diner’의 요구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다. 요리 제공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여 Cook들의 참여를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도 Diner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함으로써,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관건이다.

글 _ 김지영

▶ 관련자료

- The Guardian(2013.4.16), Insight and Engagement Hub from the Local Government Network 'Food for thought: project sees neighbours sharing an extra plate' <http://www.guardian.co.uk/local-government-network/2013/apr/16/food-casserole-project-neighbours-social-exclusion?INTCMP=SRCH>
- FutureGov 홈페이지 캐서롤 클럽 소개기사(2013.4.17) <http://wearefuturegov.com/case-study/casserole/>
- Casserole Club 홈페이지 <http://www.casseroleclub.com/>

사회개발과 도시개발의 성공적인 접목 : 사회 통합적 도시

지난 2013년 1월 말, 베를린 시의 사회 통합적 도시 사업인 「근린지역 관리 계획(Quartiersmanagement)」이 유럽연합이 지역개발 우수사례에 수여하는 레지오스타상(RegioStars Award)을 수상하였다. 베를린 시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경험 탓에 각 지역 간 거주민의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에 대한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해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 통합적 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근린지역 관리 계획(Quartiersmanagement-Neighborhood Management)」을 실행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의 사회 통합적 도시(Soziale Stadt) 사업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미래 주도적 도시 개발(Zukunftsinitiative Stadtteil) 사업에도 속해 있다.

베를린에서는 복지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옛 동독 지구를 중심으로 이웃지역 주민회의를 통한 역량강화사업, 이민자 출신 가정의 자녀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공부방 사업, 지역주민 간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이 운영하는 카페 사업, 청년과 이민자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베를린 시내 총 34개 지역 내 39만 명의 시민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

베를린 시내 대표적인 동독 지역인 프리드리히샤인-크로이츠베르크(Friedrichshain-Kreuzberg)구에 위치한 메링플라츠(Mehringplatz) 사업지구에서 실행된 이웃 지역 관리 계획을 살펴보면, 지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이민 2세 아동의 초기 언어교육 지원을 실시하는 동시에 낙후된 지역 초등학교 건물을 재건축하여 지역 아동의 실제적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학부모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 2회 부모 카페를 열어 자녀 학습 지도에 관한 의견 나눔의 장을 제공하였다.

1999년에 도시개발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올해로 14주년을 맞은 독일의 사회 통합적 도시 사업은 건축적인 재개발을 넘어, 각 지역의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 실업자, 이민자들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사회개발 프로그램을 도시개발 프로그램에 접목시켜 실제 거주자의 필요를 다양한 영역에서 창의적인 방식으로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유럽연합, 독일 연방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프로그램의 계획, 이행, 평가 과정에서 역할을 고루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지역개발기금(Regional Development Fund)을 통해 대상 지역과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고, 독일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에 소속된 도시개발담당부서, 노동문제 담당부서, 이민자 통합 문제 담당부서, 사회 및 교육 담당부서가 종합적이고 다부문적인 방식으로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3년 한 해 동안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개발을 목표로 독일 전 지방에서 진행되는 사회 통합적 도시(die Soziale Stadt) 사업을 위해, 각 주와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4억5천5백만 유로(한화 약 6,825억원) 중, 4천만 유로(한화 약 6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회 통합적 도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글 _ 전재경

▶ 관련기사

- 독일 연방 사회통합적 도시사업 홈페이지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cin_030/nn_1147180/StBauF/DE/SozialeStadt/soziale_stadt_node.html?nnn=true
- 베를린 시 도시개발 및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wohnen/quartiersmanagement/en/entw_2010.shtml
- 베를린 시 이웃지역관리사업 홈페이지 www.quartiersmanagement-berlin.de
- 유럽연합 홈페이지, RegioStars Awards 소개자료 http://ec.europa.eu/regional_policy/cooperate/regions_for_economic_change/regiostars_en.htm

해외동향 _ 독일(베를린)

베를린 시 보건사회부, 사회서비스 협약 개정 작업 중 기존 협약 단독 파기해 논란

지난 3월 25일, 베를린시 보건사회부(Senatsverwaltung für Gesundheit und Soziales)의 수장인 기독교민주당(CDU) 소속 마리오 짜야(Mario Czaja)가, 2010년 12월 사회서비스에 관한 협약(Berliner Rahmenvertrag Soziales)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며 기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사회민주당(SPD)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짜야는 서비스 전달 기관들을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협약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베를린시 정부는 매년 이 협약을 통해 6억4천만 유로(한화 약 9,600억 원)의 예산을 베를린 시내 사회서비스전달 기관에 지원해왔다. 짜야는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를 향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상적인 모니터링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감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사회부는 협약 개정을 통해 기록물 공개 범위를

넓히고자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2013년 2월부터 새 협약에 관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고, 2013년 내에 협약 개정과 함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런데 시 보건사회부가 돌연 기존 협약 종료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련자들이 당황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마리오 짜야와 보건사회부의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기존 협약을 종료시켰다면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시민단체는 올해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베를린 보건사회부 대변인 프란치스카 오버마이어(Franciska Obermeyer)는 2013년 이내로 자선단체들과 재협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개별적인 계약을 맺거나 시 정부 자체 시행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 _ 전체경

참고자료

베를린 사회서비스 협약(Berliner Rahmenvertrag Soziales)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시민단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인 장애인과 노숙인 등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단체의 예산 운용과 집행을 관장하고 있다.

이 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일어난 Treberhilfe 스캔들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Treberhilfe 스캔들은 베를린에서 노숙인 복지사업을 하는 Treberhilfe의 대표가 최고급 승용차인 마세라티(Maserati)를 몰다가 카메라에 잡혀 구설수에 오른 후에 자신의 승용차가 아닌 '손님용 차량'이라며 거짓 해명을 했지만, 뒤이어 해당 단체의 재정 운영 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각되면서 결국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이후, 베를린 내 복지단체의 재정 사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베를린 시 정부는 이들 단체와 사회서비스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해왔다.

▶ 관련자료

- 독일 일간지 Berliner Zeitung (2013.3.25) '짜야, 사회서비스단체와 협약 종료'
<http://www.berliner-zeitung.de/berlin/wohlfahrtsverbaende-czaja-kuendigt-vertraege-mit--diensten.10809148.22200698.html>
- 베를린 시 보건사회부 홈페이지(2013.3.25) <http://www.berlin.de/sen/gessoz/presse/archiv/20130325.1405.382766.html>
- 독일 시사주간지 die Zeit (2010.7.5) Berliner Treberhilfe(Treberhilfe 스캔들 관련기사)
<http://www.zeit.de/2010/27/DOS-Berliner-Treberhilfe/seite-1>

해외동향 _ 일본(나고야)

신문 판매점과 고독사 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

지난 3월 나고야시에서는 시내 신문 판매점 389곳이 가입한 협의회와 고독사 방지를 위한 협력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편함에 신문이 쌓여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바로 각 구청에 소재한 사회복지사무소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안부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최근 일본에서는 고독사, 특히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독거노인이 사후 한참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도심부의 아파트 단지에서의 고독사 문제가 일본방송협회(NHK) 특집으로 다루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의 거주자 대다수가 경제성장시기에 지방에서 올라와 입주한 주민들로, 자녀세대의 출가로 인해 독거노인이거나 노부부만으로 구성된 노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단지문제'라고 불리는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인근주민과의 관계가 희박한 대도시의 경우,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위원들이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을 위해 가정방문을 하는 것 등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최근 들어 시가 적극적으로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고독사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나고야시의 인구는 약226만 명이며, 고령화율 22.1%, 독거노인가구 10.1%(98,841가구), 노부부가구 9.3%(91,716가구)로, 고령자로만 구성된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일본 시구정촌별 장래추계인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3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시구정촌 중 3위로 나고야가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7%(414,490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독거노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글 _ 김원경

▶ 관련자료

- 나고야시 웹사이트(名古屋ホームページ)(2013.3.22), "나고야시 신문판매점 지역안전협의회와의 고령자 돌봄에 관한 협정 체결에 대하여"(平成25年3月22日 名古屋市新聞販売店地域安全協議 との高齢者見守りに関する協定の締結について)
<http://www.city.nagoya.jp/kenkofukushi/page/0000046185.html>
-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8.12.추계), "일본 시구정촌별 장래추계인구"
<http://www.ipss.go.jp/pp-shicyoson/j/shicyoson08/t--page.asp>
- 닛세이 기초연구소(2011), "Self-Neglect와 고립사에 관한 실태파악과 지역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ニッセイ基礎研究所セルフ・ネグレクトと孤立死に関する実態把握と地域支援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11)
<http://www.nli-research.co.jp/report/misc/2011/sn110421.pdf>

빈집을 지역 살롱으로 개조하여 세대 간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히로시마현 쿠레시 가와하라이시 지구(地區)의 한 빈집이 올해 3월 21일 어르신들의 거실 「아늑한 집」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살롱은 지역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쿠레시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졌다. 앞으로, 어린이들도 쉽게 들를 수 있도록 도우미(자원봉사자)가 교대로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교류의 거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살롱은 히로시마현의 「지역 상호지지체제 만들기 사업」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히로시마현과 쿠레시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옛 치과병원 터에 조성했다. 건물은 상점과 주택이 늘어서 있는 거리 모서리의 목조 2층 건물로 수년 전부터 빈집인 상태였다. 이 집의 일부(25㎡)를 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아 내부 수리를 한 후 개조하게 되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를 수리했고, 내부에는 탁자와 의자를 갖춰 커피나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하였다.

「아늑한 집」의 운영대표인 마을 자치회장에 의하면, 원래 이 지역에서는 1년에 수차례 집회소 등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살롱을 개최해 왔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외출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상설

화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던 중, 마침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의 거실 만들기」사업을 시작하면서, 쿠레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향후 3년 동안 이 사업의 효과를 살펴본 후에, 시내 각 지역에 확대할 계획이다.

가와하라이시 지구의 인구는 약 4,500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당분간 살롱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된다. 이 살롱은 등하교하는 아동의 주변을 살피는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살롱 내부에 유치원 아동의 작품 전시를 하는 등 세대간 교류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살롱은 히로시마현에서만 약 3,000개소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형태는 월 1회부터 주 2~3회 운영 등 다양하다. 빈집의 개보수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전기료 등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지자체 및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분담한다. 이러한 지역 살롱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모두가 다양한 지역 복지활동에 참가하여 서로 돕고 지지하는 복지커뮤니케이션 만들기가 가능하다는 매력 있어 일본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다.

글 _ 이순성

▶ 관련자료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조간 히로시마(2013.3.22) '빈집, 지역살롱으로(空き家、地域サロンに)'
http://mytown.asahi.com/hiroshima/news.php?k_id=35000001303220001

복지이슈Today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외 복지동향을 소개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창간된 월간지입니다.

- 본지는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www.welfare.seoul.kr (복지자료 → 복지이슈Today)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개선을 위한 의견은 발간팀(경영지원부 교류협력팀, 02-2011-0570, jykim@welfare.seoul.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서울시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Seoul Welfare Foundation

www.welfare.seoul.kr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52
Tel. 02)2011-0570 Fax. 02)2011-0520